

제조업 공동화 현황 및 평가

하 병 기

(선임연구위원 · 산업경쟁력실)

hbk@kiet.re.kr

〈요 약〉

국내총생산 측면에서 한국 경제에서 제조업의 역할은 축소되지 않았다. 오히려 외환위기 이후 제조업은 높은 생산성 향상 등으로 한국 경제에의 기여도가 과거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 측면에서는 제조업의 비중이 80년대 중반 이후 계속 낮아져 탈공업화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직접투자의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할 경우 제조업 공동화를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국내투자, 해외 및 외국인 직접투자가 부진한 것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의 국내투자 부진은 성장잠재력 및 경쟁력 약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제조업의 역할이 앞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산업구조조정도 본격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제조업의 명목 GDP 비중이 과거 감소 추세로 회귀할 개연성이 큰 데다, 저임금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투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1. 서론

기업의 해외이전으로 가까운 장래에 제조업 공동화가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기업환경 악화로 기업이 해외로 생산을 이전함에 따라 4~5년 이내에 한국 경제에서 제조업이 붕괴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의 더딘 경기 회복과 노

사관계의 불안정성에 더하여 제조업 공동화론은 경제 불안과 위기감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한국 경제가 제조업의 성장과 수출입에 크게 의존하여 왔기 때문에 제조업에 구멍이 뚫린다는 공동화 단어 그 자체가 위기감을 야기한다. 게다가, 서비스업의 경쟁력이 아직 국제적인 수준에 비추어 미약하다고 인식되는 상황에서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불안케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 제조업의 공동화 현황 및 미래 가능성을 평가하여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자 한다.

2. 제조업의 역할

한국 경제가 제조업 수출을 통하여 성장하여 왔으며 미래의 성장 축도 제조업이므로 제조업의 사양화는 장래 경제성장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조업의 역할을 먼저 살펴본다. 경제성장 위협 여부는 제조업 비중의 저하가 선진국으로 가는 산업구조조정 의 자연스러운 결과인가 혹은 기업의 해외 이전에 따른 결과인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탈공업화는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이 저하되어 가는 현상으로 원인을 규정하지 않는데 비해, 제조업 공동화는 탈공업화의 원인으로 해외투자를 지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1) 고용

총고용(취업자 기준)에서 차지하는 제조업 고용의 비중은 1989년 27.8%로 최고를 기록한 이후 계속 하락하여 2001년 현재 19.7%로 낮아졌다. 이는 2000년 EU 평균(20.6%) 및 일본(20.5%)보다 낮은 수준이나, 2001년 미국(12.6%)보다는 높다. 제조업 고용 비중만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결국 고용 측면에서는 90년대 이후 제조업의 비중이 저하되는 탈공업화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제조업 부문별 고용구조를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는 경공업 비중이 여타국에 비해 높다. 제조업 총고용에서 차지하는 경공업 비중이 한국이 47.3%(2001년)인데 비해 미국과 일본은 이보다 낮은 40.4%(2000년)와 39.4%(1998년)이다. 선진국의 고용구조로 보아 경공업 부문이 쇠퇴할

〈표 1〉 제조업 부문별 고용구조의 국제비교

단위 : %

		한국(2001)	일본(1998)	미국(2000)
제조업 구 조	경공업	47.3	39.4	40.4
	중화학공업	52.7	60.6	59.6
	(기초 소재)	18.6	21.7	24.7
	(조립 가공)	34.1	38.9	34.9

자료: OECD, STAN Database.
한국은행.

경우 제조업의 고용이 축소할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2) GDP

1) 비중

명목 GDP(국내 총생산)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8년 32.1%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까지는 계속 감소하였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증가세로 반전하였지만 다시 2001년부터 감소세로 재반전하여 2002년에는 28.8%로 낮아졌다. 외환 위기로 일인당 소득이 감소하면서 제조업의 비중도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 경제의 일인당 소득이 1997년과 2001년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이 비중이 감소추세에 재진입하였다고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질 GDP로 측정할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1985년 24.8%에서 2001년과 2002년에는 33.4%로 증가한 것이다. 제조업의 비중이 축소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탈공업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실질 기준에 따른 이러한 제조업 비중의 증가는 제조업이 경제성장을 주도하여 왔으며 경제내에서 제조업의 역할이 감소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성장

산업별로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바를 살펴보면, 제조업의 기여도가 외환위기 이후 평균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80년대에 제조업의 성장이 경제 전체 성장에 기여한 비율은

〈표 2〉 주요 지표의 추이

단위 : %

	취업자 수 (제조업 비중)	명목 GDP (제조업 비중)	실질 GDP (제조업 비중)	경제 성장률	총고정자본 형성증가율
1985	23.4	29.5	24.8	6.5	4.3
1990	27.2	28.9	28.0	9.0	25.9
1995	23.5	29.2	29.2	8.9	11.9
1997	21.2	28.7	29.5	5.0	-2.2
1998	19.5	30.5	29.0	-6.7	-21.2
1999	19.8	30.6	31.8	10.9	3.7
2000	20.2	31.3	33.8	9.3	11.4
2001	19.7	30.3	33.4	3.1	-1.8
2002	-	28.8	33.4	5.3	4.8

자료 : 한국은행.

주 : 고용비중은 1989년 27.8%로 가장 높으며, 명목 GDP는 1988년 32.1%로 가장 높음.

<표 3>

산업별 성장 기여도

단위 : %

	1981~90	1991~97	1997~2002
제조업	34.0	31.9	49.1
서비스업	61.9	65.0	51.6
1차산업	4.1	3.1	-0.7
합 계	100.0	100.0	100.0

34%에서 90년대에는 31.9%로 낮아졌다. 하지만 1997년 이후에는 이 비율이 49.1%로 높아져 제조업의 성장 기여도가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성장 기여도는 바로 앞서 살펴본 제조업 비중의 상향으로 반영된 것이다.

3) 생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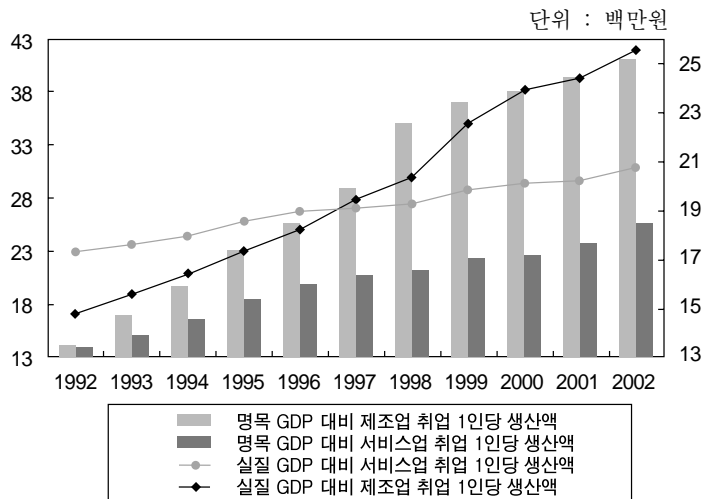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일인당 부가가치를 비교하여 보면, 제조업의 생산

성이 크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취업자 일인당 명목 GDP의 격차는 1998년 이후 더욱 확대되어 오고 있다. 1982년 제조업의 취업자 일인당 명목 GDP는 1,490만원으로 서비스업과 30만원밖에 차이가 없었다. 2002년에는 이 수치가 4,110만원으로 서비스업보다 1,550만원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취업자의 연령을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하지만, 근원적으로는 부가가치 창출에서

<그림 1>

일인당 GDP 생산액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우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역으로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제조업에 비해 낙후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3) GDP 및 고용 비중

제조업의 고용창출 능력이 낮아졌지만 제조업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은 저하되지 않았다. 그 결과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과 고용 비중간의 편차가 1990년 이후 확대되어 오고 있다.

부가가치 비중의 대고용 비중 비율을 보면, 한국의 경우 1.52(2001년)로 OECD 국가 평균인 1.1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는 우리 경제가 최근까지 겪은 산업구조조정 특색으로 지적할 수 있다. 반도체, 통신기기 등 IT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집약 산업 위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면서 제조업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은 강화된 반면, 자본 위주의 요소투입구조 변화와 기술진보에 의한 노동생산성 향상 등으로 고용창출이 많지 않았다.

우리 경제의 이러한 현상은 제조업 생산의 비교우위가 높고 서비스업의 비교우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비제조업과 제조업의 불균형 발전으로 상호 보완성이 낮아 양 산업이 상호연관효과를 얻기 힘들 가능성이 높다.

(4) 제조업 비중 전망

2001년 이후 국내투자 부진 등과 더불어 명목 부가가치 및 고용 등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소폭 낮아졌다. 소득 증가와 함께 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이므로 최근의 이러한 움직임이 추세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만, 실질 부가가치 기준으로 제조업 비중의 향방에 대한 예측은 다소 까다롭다. 하지만, Rowthorn(1999)의 연구가 제시한 바와 같이 소득증가에 따른 서비스 수요 확대 그리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의 차이를 고려하면 제조업 비중이 장기적으로는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하여 다음과 같은 요인은 한국경제에서 제조업 비중이 하락하는 방향

〈표 4〉 OECD 회원국의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의 비중 변화

단위 : %

	부가가치 생산비중(A)		고용비중(B)		A/B	
	1960	1995	1960	1995	1960	1995
제조업	29.7	19.8	26	18	114	110
서비스업	52.6	68.2	43	65	112	159

자료 : OECD(1999).

주 : GDP 및 총고용에서 점하는 비중.

으로 예상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단지, 어느 정도의 속도로 진행될 것인가가 중요하다.

첫째, 90년대 IT산업의 호조와 90년 중반 이후 건설업 부진으로 제조업의 실질 성장이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였으나, IT산업을 대체할 신산업의 조기 출현을 기대하기가 힘들다.

둘째, 명목 GDP 기준 제조업 비중이 1988년 32.1%를 최고로, 감소하는 추세이었다가 외환위기로 전환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락추세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2002년에는

일인당 소득이 1만 달러를 회복함으로써 과거의 감소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더욱 크다.

셋째,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과 고용비중의 현재의 격차는 계속 유지되기가 힘들 것이다.

넷째, Rowthorn(1999)이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국내 투자의 대GDP 비중 저하는 제조업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제조업 비중의 저하는 <표 5>에서와 같이 여타 선진국의 사례를 통하여서도 예상할 수 있다.

<표 5> 소득수준별 선진국의 산업구조

	연 도	산업구조(%)				1인당 GDP (달러)
		농림수산 및 광업	제조업	사회간접자본	서비스업	
한 국	2001	4.8	30.0	11.1	54.1	8,900
일 본	1980	4.1	28.2	11.6	56.0	9,069
	1987	2.9	26.9	11.5	58.6	19,806
	2000	1.4	20.8	9.7	68.1	37,542
미 국	1977	5.4	22.8	7.3	64.6	8,962
	1988	3.6	19.2	7.5	69.6	19,912
	2001	2.8	14.1	7.0	76.1	35,401
영 국	1982	10.0	23.7	8.9	57.5	8,631
	1996	4.5	20.5	7.2	67.8	19,621
	2000	4.0	18.6	7.1	70.3	24,060
독 일	1978	3.4	31.9	8.9	55.8	9,177
	1990	2.1	29.3	7.8	60.8	20,665
	2001	1.5	22.2	6.6	69.7	22,500

자료 : OECD, STAN Database.

OECD, *National Accounts of OECD Countries*, Paris, OECD, 2002.

- 주 : 1) 산업구조는 경상가격 기준임.
 2) 독일의 경우 1978년과 1990년은 서독 기준임.
 3) 전기, 가스, 수도, 건설업임.

3. 공동화 평가

(1) 국내 투자

GDP 중 설비투자는 2001년에 전년 대비 9.6% 감소한 데 이어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제조업 생산능력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최근 회복기미가 있기는 하지만 투자부진은 생산능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와 공동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를 심화시킨다.

특히, 90년대 들어 GDP 대비 투자비율인 투자율이 80년대의 30% 수준에서 20% 수준으로 하락함으로써 추세화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투자부진의 결과로 고정자본소모액의 대총고정자본형성의 비율이 1998년 이후 커짐으로써 생산능력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이 비율은 70년대의 25.5%에서 2003년 1/4분기에는 43.5%로 높아졌다. 이 자본소모가 투자에 비해 커지면서 제조업 생산능력 증가율이 하락하고 있다. 제조업 생

산능력 증가율은 70년대의 15.6%에서 2003년 1/4분기에 2.5%로 하락하였다.

국내투자의 부진은 과거 투입주도형 성장에서 혁신주도형 성장으로 나아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최근의 부진은 내부 경제환경의 불안정성에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금리인하 등의 정부 정책이 유효하지 못한 것은 기업환경 및 정책에 대한 기업가 및 민간의 불확신성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투자부진이 계속될 경우 자칫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의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우리 경제의 기업 환경에 대해서는 다양한 국제기관이 미국, 네덜란드 등의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규제와 관련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기업의 48.7%가 기업 규제로 인해 투자를 철회하거나 보류하였다고 응답할 정도이다. 규제로 가장 큰 경영 애로를 느끼는 분야로는 신규사업 진출(26.3%)과 설비투자(18.2%)이고,

〈표 6〉 투자 관련 지표

	1971~80	1981~90	1991~97	1998~2000	2001~2002	2003, 1/4
고정자본소모/ 총고정자본형성	25.5	32.2	29.2	43.6	42.7	43.5
제조업 생산능력 증가율	15.6	8.2	5.7	7.9	3.6	2.5

주 : 생산능력 증가율은 연평균 증가율이며, 2003. 1/4분기는 전년 동기비임.

그 다음으로 인력구조조정(17.2%)을 들고 있어 노사분야 규제에 관해서도 기업들이 크게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국제직접투자

1) 동향

국제직접투자는 최근에는 양 투자 모두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는 2001년 50억 3,000만 달러에서 2002년에는 30억 3,000만 달러로 감소하였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감소폭은 특히 심하다. 2000년엔 102억 달러였던 것이 2002년에는 37억 달러로 감소하였다. 양 투자 모두 부진한 가운데 외국인 직접투자의 부진이 심한 형편이다.

직접투자수지(=외국인 투자 - 해외직접투자)는 2002년까지 총 103억 달러의 흑자를 나타내었다. 직접투자수지는 90년대 들어 기업 세계화로 적자로 반전되었다가 외환위기 이후 성공적인 외국인투자 유치로 흑자로 돌아섰다. 2001년 이후에는 양 투자가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2001년 들어 11억 달러 규모의 투자수지 적자로 반전되어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를 확대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경쟁력이 있는 전자통신장비업종에서 2001년 해외 직접투자가 외국인 직접투자를 19

억 달러나 초과함으로써 제조업 부문의 적자를 주도하였다. 2001년 중 전자통신장비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9억 달러로 제조업 중 외국인의 투자가 가장 활발한 업종이자 또한 해외투자가 가장 활발한 업종이다.

특히, 2002년 이후에는 중국이 우리 기업의 최대 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하면서 중국 경제가 블랙홀의 역할을 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03년 6월 현재 대중국 총 투자의 누적액은 전체 투자의 17%인 71억 8,000만 달러로 과거 투자가 많았던 미국 다음으로 많다. 건수로는 2003년 6월까지 8,036건으로 중국 투자가 전체 투자의 44.5%를 차지하여 최대 투자 대상국이다. 우리 기업이 가장 빈번하게 투자하는 국가가 중국이라는 의미이다. 지리적·문화적인 근접성, 경제성장 잠재성 그리고 낮은 임금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매력적인 투자처임에 분명하다.

최대 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한 중국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도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의 성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데다 ASEAN 등과 중국의 자유무역 협정 가능성이 커짐으로써 중국 시장의 잠재력이 투자 수요를 유발하고 있다. 중국의 성장세가 이어지는 한 중국은 투자 액수 및 건수에서 계속 우리 기업의 최대 투자 대상국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리적으로 가까운

〈표 7〉 국제직접투자의 최근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외국인 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		투자 수지	
	전 체	제조업	전 체	제조업	전 체	제조업
1995	1,363.6	590.5	3,136.2	2,048.8	-1,772.6	-1,458.3
1996	2,314.0	1,301.9	4,409.0	2,813.8	-2,095.0	-1,511.9
1997	3,089.8	1,835.0	3,593.4	1,806.7	-503.6	28.3
1998	5,279.4	2,911.8	4,725.7	2,319.1	553.7	592.7
1999	10,803.2	6,247.8	3,278.5	1,664.1	7,524.7	4,583.7
2000	10,177.8	5,771.1	4,855.6	1,430.3	5,322.2	4,340.8
2001	4,862.2	2,577.4	5,032.1	3,749.0	-169.9	-1,171.6
2002	3,675.2	1,456.1	3,031.6	1,539.7	643.6	-83.6
누계	51,130.5	28,901.8	40,849.6	21,872.3	10,289.0	7,029.5

주 : 외국인 직접투자는 도입 기준, 해외직접투자는 총투자 기준임.

데다 경제적으로도 상호 무역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어 중국에 대한 투자 집중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다만, 위안화가 예상외로 큰 폭으로 절상되어 중국 경기가 후퇴할 경우에는 투자 수요가 감소하거나 혹은 청산 등으로 철수하는 기업의 수가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단순히 국내 투자 및 기업환경 악화로 최근 해외투자에 나선 기업이 상당수에 달한다고 보면, 이들 기업의 해외 경영이 열악할 수밖에 없어 경기 후퇴

에 민감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의 해외직접투자는 선진국 등 여타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다. 1999년 해외직접투자의 대GDP 비중은 1.2%(2002년은 0.5%)로 내수 의존형인 미국(1.5%) 및 일본(1.5%)과 비슷하나 무역 의존형인 스웨덴(7.6%) 및 네덜란드 경제(14.3%)에 비해서는 낮다. 해외직접투자 스톡(stock)의 대GDP 비율은 2000년 말 현재 개도국 평균(11.9%)에도 못 미치는 5.8%(2002년은 6.5%)에 지나지 않는다.

〈표 8〉 국제직접투자 스톡(stock)의 대GDP 비율(2000년 기준)

단위 : %

	선진국	개도국	한 국			미 국	일 본	영 국	네덜란드	스웨덴	아일랜드
			1995	2000	2002						
외국인투자	17.1	30.9	1.9	8.0	9.2	12.4	1.1	30.5	65.9	36.1	68.2
해외투자	22.1	11.9	2.1	5.8	6.5	13.2	5.8	63.2	83.8	53.8	19.4

자료 : UNCTAD.

주 : 한국은 수출입은행 및 산자부의 잔액 기준 투자액 기준임.

또한 한국 다국적 기업의 해외생산 비율(현지법인 매출액/모기업 매출액)이 2002년 중 12.7%로 일본의 37.2%에 비해서는 크게 낮다. 다만,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높아 무역 측면에서는 세계화가 상당수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경제의 무역의존도가 66%로 일본의 18.8%, 미국의 17.8%에 비해 높으나, 대만의 107.2%에 비해서는 낮다. 해외시장 진입을 위해 해외직접투자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외직접투자 확대의 여지가 크다고 하겠다.

2) 원인

80년대 한국 기업은 주로 자원개발을 목적으로 해외로 진출하였다. 자원개발을 목적으로 한 투자가 총투자(신고 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건수 기준으로는 88.8%, 금액 기준으로는 61.3%에 이르렀다. 하지만, 90년대 들어서면서는 자원개발을 목적으로 한 투자의 비중이 크게 낮아졌다. 투자 건수 기준으로는 비중이 5% 미만으로 낮아졌다. 이는 한국 경제의 개방화 및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해외생산에 참여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절대적으로 감소한 것이 아니라 자원개발을 목적으로 투자가 소수로 전락한 것이다.

90년대에는 수출확대를 목적으로

한 투자와 저임금 활용을 위한 투자가 대종을 구성하고 있다. 저임금 활용은 산업구조조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내 생산에서 비교우위가 없는 품목을 기업이 해외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90년대 전세계 투자 동향에서 보면, 중반에 저임금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의 비중이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지는 추세를 알 수 있다. 국내에서 다시 산업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90년대 초반 저임금 활용의 비중이 높았던 것은 80년대 말의 임금 급등으로 섬유, 신발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 데 따른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현재의 추세는 산업내 구조조정(산업 중 세부업종별로 경쟁력이 약화되어 가고 있는 품목의 해외생산이 추진되는)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중국에 대한 투자의 경우는 전세계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임금 활용의 투자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해외투자 목적 변화 추이로 미루어 90년대 초와 같은 해외투자 확대 가능성 및 개연성이 크다고 하겠다.

3) 효과

국제직접투자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통하여 세계경제의 복지를 향상

〈표 9〉 주요 투자목적 비중 추이

단위 : %

	전 체				중 국			
	수출촉진		저임금		수출촉진		저임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92	50.2	30.8	30.7	15.3	43.7	48.5	45.7	46.2
1993	50.4	66.2	36.6	23.1	44.0	54.9	46.6	42.0
1994	50.6	66.0	37.3	13.6	44.6	56.9	45.5	34.9
1995	53.4	75.0	32.9	12.9	45.0	59.6	45.3	27.6
1996	47.0	51.2	37.9	9.8	39.0	44.8	53.5	26.6
1997	48.7	52.3	33.6	12.6	37.6	49.6	52.8	32.6
1998	59.0	81.2	26.7	9.1	47.1	66.4	41.2	24.5
1999	51.2	54.5	27.3	12.0	41.2	55.8	46.5	31.9
2000	53.7	44.1	24.0	13.5	49.4	51.3	42.6	26.5
2001	55.9	80.1	29.2	8.2	46.6	52.4	44.1	39.7
2002	51.6	58.1	34.9	26.3	45.0	56.6	45.2	32.6
2003	47.9	28.3	38.6	18.1	42.5	48.8	47.3	40.0
누계	46.2	54.3	28.1	9.0	43.9	53.3	45.6	32.6

자료 : 수출입은행.

주 : 1) 신고기준임.

2) 기타 목적을 제외하고 비중을 계산하였음.

시킨다. 기업은 최적의 입지에서 영업함으로써 경쟁력을 유지하고 또한 투자를 통하여 성장하여 간다. 그 결과로 일국 경제도 경쟁력을 유지하고 성장하여 간다. 해외직접투자의 긍정적인 측면이다.

특히,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해외생산은 모기업과 해외 현지법인 간의 기업내 거래를 통하여 수출수요를 확대하고 무역수지를 개선함으로써 제조업 비중의 저하 속도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수출입은행 조사에 의하면, 2001년 1,000만 달러 이상 투자한 311개 현

지법인에 대한 수출이 276억 3,000만 달러, 수입이 78억 5,0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97억 8,0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개선한 것이다(2001년 전체 무역흑자는 93억 4,000만 달러임). 이는 투자잔액 1달러당 1.55달러의 수출촉진, 1.11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에 해당하는 것이다.

특히, 제조업 공동화의 주요 위협요인으로 지목되는 대중 투자도 무역수지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 및 아세안 현지법인과 수출입으로 인해 2002년 중 무역흑자는 18

억 1,000만 달러에 달한다. 對현지법인 수출이 32억 8,000만 달러인 데 반해 현지법인 수입은 14억 7,000만 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토대로 조사법인의 투자금액(50억 3,000만 달러)을 조사국가에 대한 제조업 투자금액(99억 2,000만 달러)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투자유발 무역수지는 35억 7,000만 달러로 추정되었다. 이는 조사국가와의 총 무역흑자의 45.6%에 달한다.

이러한 효과는 해외투자가 수출확대 및 무역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해외투자기업의 전시효과 등을 통한 수출 촉진, 경쟁력 강화 효과 등을 포함할 경우 해외투자가 경제에 미치는 이익은 일층 확대된다.

다만,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특정 산업 혹은 지역에서 기업의 해외이전이 집중될 경우에는 사회 및 경제적 문제화될 가능성이 크다. 경쟁력이 한계에 있는 업종, 예를 들면 가정용 전자업종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서 이러한 가능성이 높다. 80년대 말 그리고 90년대 초 해외이전으로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되었던 신발산업의 부산지역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구조조정을 급속하게 촉진시킬 수 있는 외부 요인으로는 FTA와 같은 해외시장 규모의 변화나 비용구조의 급변을 들 수 있다. 80년대 말 이후

봉제 및 신발산업에서 해외투자가 급격히 진행된 것은 80년대 말의 임금 급등 때문이었던 것이 그 예이다. 또한, 현재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과의 국제분업은 계속하여 한국 경제에 구조조정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4) 전망

투자목적에서 나타나는 변화, 즉 구조조정의 가능성과 우리 기업의 세계화 수준을 고려할 경우 해외직접투자가 조만간 외국인 직접투자를 크게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Dunning이 주장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해외투자가 증가한다는 투자발전단계설과도 부합한다.

다만, 투자의 양태는 과거와는 다소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첫째는 산업내 구조조정의 형태에 따른 것으로 동일한 산업내에서도 사양화되는 산업이 저임금 활용을 위해 개도국으로 이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산업 내의 가전 등이 예이다.

둘째는 대기업이 신규투자만이 아니라 글로벌 전략하에서 현지법인을 조정하는 투자가 빈번히 나타날 것이다. 2001년 LG전자가 중국 및 인도에서 청산한 자금으로 네덜란드에 투자한 예가 그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해외법인이 청산되는 경우가 빈번할 것이다.

〈표 10〉

해외직접투자 건수 추이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총 누적 건수
1,465	1,322	614	1,087	2,056	2,116	2,404	18,869

우리나라의 해외투자는 세계 경기의 회복세와 더불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액수가 감소한 가운데서도 해외직접투자 건수는 계속 증가하여 2002년에는 2,404건을 기록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우리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세계화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국내의 열악한 기업환경도 일조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공단 입주 중소기업의 22.4%가 2002년 중장래 해외이전을 고려한 반면에 대기업의 10.3%만이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이를 반영한 것이다. 80년대 말 봉제 및 신발산업의 해외이전이 임금의 급상승 때문이었다는 사실에서 비용 급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4. 평가 및 시사점

국내총생산 측면에서 한국 경제내 제조업의 역할이 축소되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 오히려 외환위기 이후 제조업은 높은 생산성 향상 등으로 한국 경제에의 기여가 과거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제조업 공동화를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제조업의 역할 감소 및 구조조정에 대한 징후를 찾을 수가 있었다. 첫째, 일인당 국민소득이 외환위기 이전 수준에 달함으로써 제조업의 명목 GDP 비중이 감소할 개연성이 크다. 둘째, 해외직접투자 중 저임금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의 비중이 증가함으로써 고용 축소의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제조업 비중의 저하는 불가피하지만 최근의 투자 부진은 성장잠재력의 약화와 제조업 비중의 급락을 야기할 우려도 있다. 게다가, 외국인투자 및 해외투자가 부진함으로써 투자의 악순환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본다면, 현재 한국경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투자 환경 개선을 통한 다음 세 가지 요소의 회복에 있다고 하겠다.

첫째, 기업가 정신의 회복이 시급하다. 금리인하 등 다양한 정책 수단에도 불구하고 투자 회복을 기대하기 힘든 것은 기업하려는 의욕이 침체된 결과로 판단할 수 있다. 기업가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 제반 기업환경과 관련하여 선언적 및 실질적인 조치 등을 강구하여 정책 신뢰도를 제고하

여야 한다. 무분규 사업장 표창제, 무분규 선언지역의 외국인투자 유치 우대제 등을 통하여 지역 및 기업간 경쟁을 유발하고 노사관계를 개선하여 나가는 안을 생각할 수 있다. 세제, 금융 등 모든 정책을 경쟁국에 비해 최소한 열악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유의 목적으로 규제 등이 필요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단기적인 해외이전의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해 주5일제 실시 등과 같은 생산 비용 급등에 대응하여 세제감면 및 물류비용 인하 등의 contingent plan을 수립하여야 한다.

둘째, 급격한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대응책도 시급하다. 지역의 신산업 창

출 등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의 확대와 사양산업의 소프트랜딩(soft-landing)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규제개혁 장기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제반 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유통 및 물류 등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파악하여 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 및 비용편익을 분석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에 따라 규제개혁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제조업에 비해 과도한 규제, 미흡한 세제 및 재정지원 등 차별적 제도를 개선한다.

제조업의 활력이 상실될 경우 전체 경제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소득이 저하되며, 이는 다시 서비스 수요의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